

지역주민·사업체도 환경감시 참여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사업체도 환경 감시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 환경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시·도별 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민원다발지역이나 오염이 심각한 지역, 반복적인 적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공장 만들어 줍니다

화학원소를 사용해 도금처리를 하는 태진테크는 작업실의 지독한 냄새로 인해 사람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3D업종 회사였다. 하지만 최근 이 회사는 달라졌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산학협동을 통해 도금 표면처리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해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3D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작업장 근무여건 때문에 인력의 기피현상은 많이 해소됐다고 이 회사간부는 일러준다. 전선용 스위치 박스를 제조하는 회사인 현대배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회사는 프레스·금형 등의 작업 때문에 위험하고 소음진동 등이 심한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천안공업대학과 산학협동을 통해 최근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해 쾌적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생산현장의 직무 기피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 개선작업에 나섰다.

중기청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해 장비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

구리나뉘, 비소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특정폐수배출업소 배출량 저감계획 의무화

구리나뉘, 비소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특정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을 자체 수립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한강수계의 경우 오염총량제 시행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3대 강과 달리 의무화돼 있는 등 규제가 비교적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간평가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대강 수계에 위치한 개별 배출업소는 오는 7월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지시설과 청정기술을 어느 정도 설치·도입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광역시장이나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2년마다 계획서를 새롭게 고쳐 제출해야 하며 지도·점검기관은 이 계획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단지내 주거지역 소음규제법 생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7일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도 아침에는 65dB, 낮에는 70dB, 밤에는 55dB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 전자입찰·청렴서약제 도입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앞으로 물 품구매나 용역 계약 때 전자입찰제가 실시된다.

또 뇌물이나 향응 제공이 오가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뤄졌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5일 환경부는 그 동안 산하단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관리공단이 일부 시행해 왔던 전자입찰제와 청렴서약서 제도를 본부와 지방환경청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배출시설 지지체 단속평가

환경부는 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단속에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이다. 환경부는 정확한 분석 평가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자치단체별로 1인당 관리업소 수 배출업소 자료 관리 지도·점검 이행 여부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된 후 석달간의 적발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 2천253건보다 15% 적은 1천892건에 불과했다.

적발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단속권이 양 후 산업단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료 및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이지만 환경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서면평가한 후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지도·점검체계, 점검계획, 단속실적, 행정처분 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별 배출시

“

환경부는 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단속에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설 지도·점검 실태를 평가한 후 2월과 8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 시·도에 한해 상훈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단속실태 평가 및 점검이 정착되면 환경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예방적인 기능 강화, 부패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업소 20개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23일부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있는 141개 대기·수질오염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개 오염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허위로 폐수배출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한 D광학과 W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입건수사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취소토록 통보했다. 금강환경청은 또 무허가로 폐수배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한 C사 등 12개 업소에 대해서도 입건수사 하는 한편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페플라스틱 재질별 분리선별 기술 개발

기술표준원 최형기 박사와 이용무 박사는 지난 5월 13일 페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연속적으로 분리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박사 등은 (주)이오니아(대표 서강일)와 공동 연구를 통해 페플라스틱이 벨트에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근적외선(近赤外線, NIR)을 조사(照射)해 나오는 반사광을 미리 입력된 재질별 패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재질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재질이 인식된 페플라스틱들을 공기 토출장치를 통해 연속적으

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박사는 하루 4t을 처리할 수 있는 실험 설비를 통해 폐플라스틱 선별 능력을 실증한 결과, PET, PVC, PE 등 6대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 95% 이상의 선별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폐플라스틱의 형상(완제품, 파쇄물, 파손 등), 색상, 첨가제, 두께에 관계없이 재질별 선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면 이번 기술이 세계 최고인 독일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수질악화 유역 중점관리수역 선정

환경부는 경기도내 경안천과 왕숙천 등 한강특별 대책 수립(98년) 이후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유역을 중점관리수역으로 선정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9일 한강특별대책 수립 당시 고려하지 못한 수도권 상수원 지역의 교통망 증가, 토지이용 변화 등 요인으로 상수원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역을 집중 분석·평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수질보전 관리에 5천144억원 투입

충남도는 금강수질의 2급수 달성과 수질보전 등을 위한 “2003년도 물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5천14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5월 14일 도가 밝힌 관련 사업의 부문별 투자내용은 중장기 물 수요관리에 1천101억원 상수도시

설 확충 및 물수요 관리 866억원 물 관리 선진기술개발에 1천232억원 상수원 보호시책 강화 24억원 수질보전 기초시설확충 및 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1천921억원 등이다.

가전사, EU환경파고 기술로 넘는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사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파고에 기

“

기술표준원 최형기 박사와 이용무 박사는 지난 5월 13일 폐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연속적으로 분리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술로 맞서고 있다. EU 환경규제 법규는 현재 EU를 중심으로 제품 환경 문제를 시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이 역내 회원국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에도 적용돼 역외 국가들과 무역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사들은 EU의 환경규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무연(無鉛)합금(Pb-free Soldering) 기술을 전 제품에 적용키로 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일본 알미트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인쇄회로기판(PCB)에 사용되는 납(Pb) 성분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무연 솔더링(Pb-free Soldering)’ 기술을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규제가 가장 큰 냉장고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04년부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디자인(Eco-Design) 개발 과정을 적용하고 제품의 환경 성적을 공개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Eco-SCM)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밖에 마쓰시타와의 친환경 교류를 통해 EU 환경규제에 공동으로 대응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폐비닐 수거비용 대폭 인상

경기도는 올해부터 폐비닐 수거 보상을 1kg당 10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도(道)는 “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이번에 보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행위 552건 적발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해양오염 행위를 집중단

속, 폐기물을 고의로 불법 배출하는 등의 해양환경 저해행위 55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78건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행정의무 위반 등 20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7건을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260건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법정서류 미비치, 각종 기록부 허위 기재 등 행정 질서위반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기름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 43건, 폐선 및 폐기물 불법방치 42건 등 순이다.

환경오염 업체 8곳 적발, 칠곡지역 많아 지속 단속

봄철, 환경감사가 허술한 틈을 타 환경을 오염시킨 도내 환경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는 낙동강환경감시대와 함께 지난 4월 15~18일 구미 김천시, 칠곡군 등 도내 6개 시·군 36개 환경오염가능업체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칠곡군 가산면 <주> 럭키 엔프라(대표 이원준) 등 8개 업체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위반업체는 칠곡군이 4개로 가장 많았고 김천은 2개, 군위 1개, 구미 1개로 드러났다. 특히 10일간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럭키엔프라는 지난 2개월간 냉각 폐수를 무단방류했고,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대구경북능능농협종합가공사 업소(대표 윤만호)는 소각물과 폐유를 방치 주변 토양을 오염시켜 고발당했

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칠곡군 가산면 등 환경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버려지는 산업 폐수 열 · 에너지 재활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 박성룡 박사팀은 “가스 엔진 구동 열펌프(Gas Driven Heat Pump)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산업체 생산공정에 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 박성룡 박사팀은 “가스 엔진 구동 열펌프(Gas Driven Heat Pump)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산업체 생산공정에 적용, 버려지는 산업 폐수 열로부터 고온수를 만들어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용, 버려지는 산업 폐수 열로부터 고온수를 만들어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연구팀은 가스엔진의 열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2중관형 배기 다기관 및 셀-플레이트형 배가스열교환기’를 직접 제작, 이 시스템에 적용해 산업체(염색, 식품, 화공 등)에서 배출돼 그냥 버려지는 섭씨 30~50도의 산업 폐수를 60~70도의 온수로 만들어 다시 생

산 공정이나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하절기에 버려지는 폐수의 온도를 낮춰 방류하기 위해 냉각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산업 폐수 열로부터 고온수를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최종 배출되는 폐수 열을 낮출 수 있어 에너지 및 냉각탑 가동에 따른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산업체에 적용할 경우 연간 20% 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1.4분기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결과, 97개 업소를 적발해 폐쇄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업종별 적발 업소를 보면 인쇄·사진 시설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원·동물병원(24곳), 자동차 세차시설(16곳), 도장시설(10곳) 등의 순이었다.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N인쇄사 등 11곳은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된 I염색 등 6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S세차장, K대학병원, 국립K병원 등 13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연인원 2천300여명이 동원돼 약1천

400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샐 틈 없는, 반영구적인 하수도관 사업 의무화

환경부에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에 착공될 6,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는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한국상하수도 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전국에 일제 시행할 예정이다.

폐수발생업체 10곳 중 1곳 질소·인 초과배출

녹조와 적조를 일으키는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의 배출기준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폐수 배출 시설 10곳 중 1곳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4분기 동안 총 991개의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68개소가 질소, 32개소가 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팔당호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던 질소·인 배출 허용 기준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질소는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에서 30mg/l 와 60mg/l, 인은 4mg/l 와 8mg/l 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으로는 폐수 배출업소의 영세성, 환경관리인의 기술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질소·인 배출기준 강화 방침이 2000년 10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2년 2개월 동안 예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투자지역 역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

녹조와 적조를 일으키는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의 배출기준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폐수 배출시설 10곳 중 1곳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 식품 28개소, 도축 17개소, 수산물 가공 10개소, 섬유 6개소, 피혁 5개소, 도금 2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규모가 제일 큰 1종 사업장이 5개소, 2종 8개소, 3종 26개소, 4종 9개소, 5종 42개소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에 영세하고 기술이 부족한 업소를 경제·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기준 초과 배출시설의 폐수를 공공처리장으로 유입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일부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 발생량과 농도를 일정 비율 이상 줄이도록 하는 '처리효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 대기환경기준 국가기준보다 20% 강화

울산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이 오는 7월부터 국가기준보다 20%정도 강화돼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아황산가스(SO₂)와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납(Pb), 미세먼지(PM-10) 등의 기준치를 국가기준치보다 20% 강화하는 조례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유 황함량 기준치 강화

2006년부터 경유의 황(黃)함량 기준이 현행 4백30ppm 이하에서 30ppm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12일 입법예고했다.

경유의 품질기준 강화로 지금보다 황산화물은 93%, 미세먼지·질소산화물·탄화수소는 6~16% 정도 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정유업계에는 환경부 추정으로 8천억원 정도의 추가

시설비용이 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정유업체가 2006년 전에 황함량 50ppm 이하의 경유를 판매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 대기환경 기준 강화

부산의 대기환경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더 강화된다.

부산시는 지난 99년 12월 부산이 대기환경규제지역(기장 제외)로 지정됨에 따라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국가 기준보다 높게 설정, 올 하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5월 3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부산지역 대기환경기준(조례안)을 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24시간 평균치를 2005년까지 0.04ppm, 2009년까지 0.03ppm으로 개선하고 1시간 평균치는 2005년 0.12ppm, 2009년 0.10ppm 등으로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시책 강화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환경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표시하는 "ET" 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 법률은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정화 처리기술

“

올 1분기 중 오리온전기, 진주햄, 한창제지, 한국세큐리티, 동아건설산업, 등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사전 오염예방기술, 생태계보전 복원기술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등 핵심환경기술은 선진국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오염업소 무더기 적발

올 1분기 중 오리온전기, 진주햄, 한창제지, 한국세큐리티, 동아건설산업, 등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올 1~3

월 중 전국 2만3421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1749개 업체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해 이 가운데 501개 업체에 조업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512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한국세큐리티와 삼정제강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사용중지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오리온전기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조치를 받았으며, 진주햄도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수액 실수장치를 고장 방지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조치를 당했다. 또 환경부는 한창제지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화화섬 2공장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6000만원과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신한개발은 배추허용기준(100mg/sm³)을 초과한 먼지(919.5mg/sm³)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보광과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도 환경오염물질인 질소 배출허용기준(60mg/l)을 초과해 각각 4260.2mg/l, 889.2mg/l의 질소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4051개 업체 가운데 1496개 업체(36.9%)가 적발돼 위반

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33.8%)와 충남(31.2%)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단속 업체수는 다소 늘었지만 위반업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기업들이 환경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ZERO화 운동 추진

경기도 수원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ZERO)화 운동을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市)의 이 같은 방침은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가 1998년 214t, 1999년 227t, 2000년 233t, 2001년 254t, 2002년 256t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처리비용은 물론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환경 단속 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5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비산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이관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729개소를 정밀 단속한 결과, 오염방지 시설 고장 등 84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구지방환경청이 적발한 24건에 비해 3.5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과금도 전

년도 같은 기간 820여만원에서 4천 600여만원으로, 과태료는 540만원에서 1천600여만원으로 각각 5배, 3배가량 증가했다.

환경오염 신고 전화 울림주기 2분대 진입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하는 환경신문고(128번)의 울림주기가 가파른 상승곡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하는
환경신문고(128번)의 울림주기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환경오염 행위는 전국적으로 모두 18만5천539건으로 하루 평균 508건에 달했다.

2000년에는 하루 평균 318건, 2001년에는 434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환경신문고가 울리는 간격도 2000년 4분30초, 제작년 3분20초에서 작년에는 2분50초로 짧아져 울림주기가 2분대로 진입했다.

분야별로는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신

고가 53.3%(9만9천23건), 폐기물이 40.7%(7만5천469건)이었으며 수질(1.5%, 2천7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 중에서는 자동차매연 신고가 81.1%를 차지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4만5천190건에 모두 11억5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14억2천만원이 지급됐던 제작년보다 액수가 23% 가량 감소한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 지급 횟수, 1인당 지급액, 신고 유효기간 등을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포상금 지급액은 경기 2억1천 900만원 전북 1억2천700만원 경남 1억1천만원 대구 1억300만원 서울 8천 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시내지역의 경우 국번없이 128번(시·군·구 접수), 시외지역은 해당 지역번호와 128번(16개 광역단체 접수)을 누르면 된다.

축산폐수 ‘환경오염 주범’

축산폐수가 당국의 관리 소홀과 일부 농가의 무관심 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투기되고 있어 중산간 일대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23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중산간 일대에 분포돼 있는 도내 양돈농가는 372가구(지난해 말 현재)로, 이들이 키우는 돼지는 37만4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

회된 허가 및 신고농가는 328가구가
고, 폐수처리에 아무런 법적무도 지
지 않는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44가
구로 대부분 퇴비화·액비화 등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

지도·단속, 인·허가, 환경영향평가협의 담당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식사도 불가 지난 2월 18일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대통령령(제17906호)으로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여 「환경부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은 지난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환경부소속공무원과 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동 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이용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지도·단속, 인·허가, 협의담당 공무원은 제외된다.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가 있다.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 다만, 친족과 소속직원에게 한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경조금품도 친족 등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시의 조치

- 행동강령을 위반한 환경부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환경부공무원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